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호열

1. 미국발 위기의 그림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소위 '국경 없는 경제' (Borderless Economy)를 향하여 달음질하여 온 지구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리고,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환율이나 주가와 같은 결정적 금융지표들도 최근 들어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술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를 팔아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짐작컨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율이 지극히 높으며, 외국인에 전면 개방된 자본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증폭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출처가 미국의 금융부분이며 1980년대 등장한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경제의 운용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너졌다거나 국민경제는 물론 국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성급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주목하는 신문보도가 눈에 뜨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2009년 2월 28일과 3월 1일자 병합호(併合號)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부유층 6,560억 달러의 증세와 서민층 1,490억 달러의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레이건 행정부 이래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자유주의적 정책기조, 즉 '감세'와 '작은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공표된 것이

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1990년대를 풍미했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 예산’의 틀을 벗어나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의료보장 등 사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고도 보도했다.

미국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4,8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목하 영리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의료업과 민영보험업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형 시장경제질서의 진면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권력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장악해왔지만 경제운용과 경쟁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테면, 시카고학파가 맹위를 떨치던 1980년대에도 수직적 거래제한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경쟁정책과 판례법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시장경제는 그 자체의 파동을 그리면서 동적(動的)으로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 혁명’(Capitalist Revolution)이라는 피터 버거(Peter L. Berger)류(類)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를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풍요함을 한 세대 안에 체험적으로 누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1997년도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였다면, 개방체제 하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이번 파동이 그리는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든든하게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덧붙이게 된다.

2. 지난 겨울 다시 읽은 ‘스콧 니어링 자서전’

이야기를 바꾸어 보자. 비록 체 게바라(Che Guevara)나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지도 못했고 헤르베르트 마르크루제(Herbert Marcuse)와 같은 이론가도 아니었지만, 스콧 니어링(Scott Nearing)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이자 급진주의자였다. 니어링은 필라델피아 인근의 탄광촌을 장악하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와튼스쿨의 교수가 된다. 미국 자본주의가 급팽창하면서 소용돌이치던 시절에 청년기를 보낸 그는,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에 끝까지 저항하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소수권력층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미국식 민주정치를 부정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니어링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시현(示現)하였다. 평생 단풍나무에서 시럽을 짜는 등 자급농(自給農)의 삶을 살면서 채식으로 일관하였고, 자신의 시간을 노동과 같은 직접적 생산 활동과 독서나 강연과 같은 지적 활동,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 등 세 가지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고 만다. 그러나 실패와 소외로 점철된 그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결혼은 그가 말한 대로 “운이 좋았다”. 40대 후반에 만난 스무 살이나 어린 아름다운 아내 헬렌 니어링(Helen Nearing)은, 결혼 후 60년에 걸친 그의 삶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가 되었고, 니어링 부부의 금욕적인 삶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히피들과 그 이후의 친환경적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델이 되었다.

시장경제와 돈을 배격하는 니어링에게도 (역설적이지만) 여러 차례 거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뉴욕의 한 재력가가 거대한 유산을 넘기겠다는 제안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한다. 또한, 1차 세계대전 후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신음하던 독일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독일의 한 도시가 발행한 800달러짜리 공채가 6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하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공채증서 처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다. 전쟁으로 인한 이 비정상적인 이득이 독일 국민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라는 생각이 미친 그는 공채증서를 난로 속에 던져 버린다. 그리고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살았던 버몬트의 임야와 농장이 스키장 개발과 전쟁특수로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마을 공유지로 양도한다. 그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며, 풍요와 안락함은 필연적으로 인류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굳힌다.

미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정면으로 부인한 그의 소신은 현실과 처절하게 부딪힌다. 그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수직에서 해임당하고 사회의 주류적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간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의 삶은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다. 제도권 혹은 주류에 의하여 거듭 짓밟히고 철저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급농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철학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 그의 건강상태도 너무나 양호했다. 그는 100세가 넘도록 생이 이어지자, 스스로 죽음의 시점을 정하고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3. 스코트 니어링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지난 겨울에 다시 읽은 ‘스코트 니어링 자서전’ (The Making of a Radical)은 필자에게 또 다시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19세기 말부터 주기적으로 엄습한 여러 차례의 경제공황과 두 차례에 걸친 세

계대전은 온 몸으로 겪어낸 그의 체험적 성찰은 자본주의, 파시즘, 그리고 사회주의와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배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큰 감동은 니어링의 삶 자체가 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삭막한 시절을 겪으면서 전전공공하는 오늘 이 땅의 민초(民草)들에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속에서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어링의 사회경제관은 비현실적이며 찬성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전투적인 삶을 용기 있게, 또 즐기치게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 그리고 사회경제제도가 의당 전제하여야 할 인간상은 간디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성자, 혹은 꺾기 어려운 기상과 용기를 가진 니어링 같은 사람이 아니며, 교육을 통해 창조될 사회주의적 인간형도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오만가지 사유로 타락하고 방종할 수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통상적인 인간형이어야 한다. 탐욕에 가득한 인간들이 모여 시장을 형성하고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내기 위해 상대방을 현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으로 부딪치는 살벌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슬아슬한 균형,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본연의 얼굴이자 시장이 구성하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사실 니어링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개인의 탐욕에 기초한 체제이다. 그러나 탐욕에 기초한 체제이기에 부도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이기적이지만 자기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는 오히려 윤리적이면서 절도(節度)가 있다. 반대로 인간성의 선함 혹은 이타적인 존재로의 교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집단적 허구와 제도적 비효율을 만들어낸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그 체제는 결과적으로 항상 배덕적(背德的)이었다.

4. 사회주의의 결과적 배덕과 시장경제의 윤리

지난겨울 필자가 깊은 감동을 받은 또 다른 책은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의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세계대전의 전화(戰禍) 앞에서, 다시 말해 전쟁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일상적인 학문을 연찬(研鑽)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옥스퍼드대학의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무자비한 적으로부터 포위된 도시에서도 수학공리를 연구하고, 사형수의 감방에서 형이상학적 논증을 즐기고 교수대를 두고 길길거리며, 300명의 결사대가 10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한 죽음의 테르모필레에서도 스파르타인들이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는 사실을 루이스는 감동스럽게 지적한다.

불황은 사람들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불황을 전쟁의 공포와 비교할 수 없다. 전쟁은 임박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루이스의 말처럼 “기관총 세례를 받고 순식간에 죽느냐 혹은 40년 후 암으로 서서히 죽느냐의 차이” 일 뿐이다. 위대한 종교인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죽음을 하나의 축복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한참 빛나간 이야기이지만, 전쟁은 인간에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하는 드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대의명분을 이루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라던 1991년 이래의 장기 호황으로 쌓인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이 정상화 되찾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 정부가 앞 다투어 내걸고 있는 포퓰리스트(Populist)적인 재정지출 증대가 시장기능의 복원을 더디게 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입법 부문은 행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이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곧잘 연출되고는 한다. 여러 측면으로 숙고된 법안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한 일부 소수 의원들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이리 저리 떠밀리는 상황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내세운 각종 선심성 입법조치들이 남발되어 반시장적 해악을 미칠 개연성이 너무나도 크다. 포퓰리즘에 침윤(浸潤)된 입법조치의 반시장성(反市場性)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로 인한 구조적 해악을 최소화해야 할 부담스러운 책무는 경쟁당국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법무부의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땅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엄습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과 가계는 당연히 허리끈을 더욱 죄고 부실의 원인을 털어내는 근면과 절약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불황은 선순환(善循環)의 계기로 반전되는 것이고, 개별 경제주체의 탐욕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개인적 미덕을 통하여 동적인 조화와 균형을 복원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보이는 혹은 보여야 하는 절제와 근면은, 안일과 방종에 젖어 쉽사리 타락하는 인간성의 취약함을 상쇄시키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윤리적 기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치 죽음의 공포가 인간의 유한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재난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살펴 보면, 지난해 4/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1%나 감소했고, 실질사업소득은 7.3%나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이 매우 컸다. 또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15.1%에 달했다. 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욱 커져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소득배율은 2007년 7.28배에서 지난해 7.59배로 커졌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위기의 제1차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치루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크다. 또한 이들은 포퓰리스트들이 선동할 수 있는 표적이 되어 대중민주주의의 체제 불안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은 물론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리(事理)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과는 별도로,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의미는 더욱 각별해진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의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가 얼마나 무자비한 악당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치를 떨게 된다. 경쟁기업을 삼키기 위한 그의 수법들이 연방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주요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록펠러가 엄청난 돈을 교회나 공적사업에 쏟아 부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개처럼 벌여 정승처럼 쓴' 록펠러에게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윤리가 깔려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빌 게이츠(William H. Gates)나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으로 이어지는 미국 기업가들의 기부문화와 관행 역시 미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